

한국복지패널의 쟁점과 과제

*The Issues and Challenges for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노대명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복지패널은 조사 10년을 맞이하여 기존의 성과를 정리하고, 그동안 직면했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다가오는 10년을 준비해야 할 때다. 그것은 패널조사로서 학문적 엄밀성을 유지하며 조사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조사된 내용을 사용자가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는 일이 핵심이다. 이 글은 지난 수년간 논의되었던 문제점과 과제 그리고 개선방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결측 케이스를 보정하는 다양한 방식의 모색, 가중치 부여방식에 대한 개선, 복지패널조사의 장기관리방안 등에 대한 모색은 매우 핵심적인 사항들이다.

1. 들어가며

지난 10년간 한국복지패널조사(이하 복지패널 조사)는 우리사회의 보건·복지 문제와 관련된 학술적, 정책적 연구는 물론이고, 각종 사회문제와 관련한 연구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데이터로 자리매김해 왔다. 실제 복지패널조사는 국내의 복지분야 패널조사 중 가장 규모가 커서 2014년 현재 표본규모가 약 7,048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제주도를 포함하고 있는 조사이자, 농어가가구 및 1인가구를 포함하는 조사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전체 표본에서 저소득층이

가중표집된 데이터라는 점도 전체 인구에서 비중이 작은 취약계층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이 데이터는 복지패널조사라는 점에서 가구의 소득과 지출 등 일반적인 조사내용 외에도 복지욕구와 복지서비스 수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득 관련 정보는 매우 체계적으로 조사·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우위를 갖는다. 이는 소득을 중요한 변수로 설정한 많은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는 점을 말해준다. 더욱이 주요 복지제도 및 복지서비스의 욕구와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도 큰 강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복지정책에 관심이 있는 연구

1) 이 글은 현재 한국복지패널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체 연구진이 함께 작성하였다. 이 글 뿐 아니라 항상 이 조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지현·박형준 전문연구원, 이주미·오혜인 연구원과, 신재동·박나영 전문원에게 감사한다.

자 외에도 사회과학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복지패널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출판된 연구결과는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데이터가 10년에 걸쳐 축적되면서 다루는 연구주제 또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연구방법 측면에서도 본격적인 종단적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그렇다고 복지패널조사가 성숙기에 도달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조사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벗어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패널조사로 많은 조사경험과 연구성과를 축적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는 외국의 패널조사와 비교하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 과제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향후 데이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외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일이다.

이 글에서는 복지패널조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안하기로 하겠다.

2.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발전방향

복지패널조사는 현재 전적으로 정부재정이 투입되어 이루어지는 조사이다. 이 점에서 다른 영리기관의 조사와 다른 목적과 특징을 갖는다. 그것은 이 조사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한 조사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조사내용 외에도 조사데이터

의 활용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패널조사는 그 자체로 학문적 엄밀성과 정책적 활용성 등을 가져야 하며, 패널조사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패널조사의 특성상 조사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좋은 패널데이터라도 그것이 충분한 기간동안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복지패널조사는 패널조사로서의 과학적 엄밀성이 요구된다. 그것은 조사과정과 데이터 가공, 데이터 활용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데이터의 생산주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체계적으로 조사표를 개발하고, 이를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맞게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엄밀하게 가공하고 수정 보완하여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데이터로 생산하는 일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패널데이터 사용자들의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요구에 모두 응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통계패키지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패널데이터의 구조나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복지패널조사는 보건복지분야, 특히 복지정책분야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욕구와 문제들을 포착하고, 그것이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설

계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패널조사의 문항이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수급여부 그리고 만족도 등을 묻는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연구가 순수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 정책개발에 대한 수요와 맞닿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양한 복지정책을 관통하는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그것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할지 모른다. 이는 복지패널조사의 핵심문항을 어떻게 구성하고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셋째, 복지패널조사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복지패널조사는 운영주체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라는 점에서 연구원과 대학교 간 협력을 전제로 하는 조사이다. 그리고 전액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조사라는 점에서 조사데이터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이는 이 데이터가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 외에도 일반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복지패널조사의 활용을 가로막는 제약요인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예를 들면, 데이터설명회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해야 하는 것이다.

3.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몇 가지 당면과제

복지패널조사의 효용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효용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복지패널조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에 관심이 있지, 그것을 어떻게 생산하는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른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어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외부로 드러내는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패널조사 1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지금까지 직면했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다가오는 10년을 맞이하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복지패널조사가 직면한 몇 가지 문제점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표본유지율 감소 문제

2015년 제10차 복지패널조사 결과, 원가구의 표본유지율은 67.31%로 나타나고 있다²⁾. 전체적으로 원가구 표본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원가구의 감소는 불가피하며, 일정 기간 뒤에는 원가구 표본유지율이 50%이하로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복지패널조사는 조사응답가구의 응답거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표본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한 지 10년이라는 숫자가 갖는 충격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제11차 년도의 원가구 표본

2) 원가구 표본유지율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제2차 ~ 제10차에 이르기까지 전년 대비 표본유지율이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즉, 조사가 안정화됨에 따라 원가구의 표본유지율이 감소한다거나 유지되는 경향이 확인되지 않는 것임. 이는 조사관리 인력이나 조사방식 그리고 조사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표본유지율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유지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지패널조사의 표본을 일정 규모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2012년에 했던 것처럼 신규표본을 추가하는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 원가구를 어느 시점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2) 조사대상의 적절성 문제

복지패널조사는 표본구성에서 다른 패널조사와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를 가장 표집하는 방식으로 원가구를 구성했다는 점이다. 이는 원가구에 저소득층이 상당수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노인 그리고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표본자체의 노령화(ageing) 문제가 제기되고, 그에 따라 조사가 힘든 가구의 증가로 이어진다. 뇌병변 및 치매환자 등 조사에 정상적으로 응답할 수 없는 가구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그 비중이 작아 전체 응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상적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석결과를 왜곡시킬 개연성이 있다. 조사응답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마련이 필요한 이유이다.

3) 조사내용의 적정성 문제

조사내용 중 응답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항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빈곤상황이나 자살 등 민감한 사항은 질문 자체가 응답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기존 복지패널조사는 응답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자살이나 우울 그리고 빈곤전망 등에 대한 질문을

해 왔으며, 이는 미성년 응답자의 경우 특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밖에도 조사문항 중 응답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모호할 뿐더러 유사한 내용의 문항을 반복적으로 질문한다고 느끼게 되는 문항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연구 및 조사윤리 측면에서도 재고가 필요한 사항이며, 실제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감수하고도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질문은 조사응답의 완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조사문항의 과도한 분량 문제

복지패널조사는 응답자가 질문에 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1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되며, 가구원이 많거나 부가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3~4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조사문항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데이터의 품질을 위해서는 그 분량을 적정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각 정책영역별로 조사문항의 가감을 둘러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10년간 조사했던 문항을 없애기에는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조사 분량의 합리적 재조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5) 현행 조사방식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복지패널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유한 전문 조사인력을 통해 실시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조사인력의 경우, 대다수 핵심인력의 조사경험이 10년을 넘어 보건복지정책 분야의 조사와 관련

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점은 행정부담과 비용부담의 증가를 대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이다. 사실 대부분의 패널조사 담당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조사원을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를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 비용 또한 조사원 직접채용 방식에 비해 경제적이다. 그 이유는 조사원을 서울에서 모집해 전국으로 파견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고비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조사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복지패널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6) 조급한 데이터 제공에 따른 질 저하 문제

대부분의 패널조사는 조사에 많은 공을 들이지만, 조사결과를 가공하는데도 그에 못지않은 공을 들이게 된다. 그것은 패널데이터의 특성 상 시계열적으로 정보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맞추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근 CAPI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에러 체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절감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복지패널조사는 2012년 조사시점에 응답자의 회상 문제를 개선하고 적시에 연구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조사시기를 앞당기고 학술대회 개최 시기를 늦추어 당해 연도에 조사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그 데이터를 활용해 기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간제약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보다 데이터의 각 조사항목에 대한 기술(description)로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를 생산한

연구진이 사용자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고서 작성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필요하다.

7) 데이터 사용자를 위한 편의 부족 문제

복지패널조사는 국내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패널데이터라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실제 연구자들이 활용하는데 다소 복잡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데이터의 생산 뿐 아니라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패널데이터의 특성 상 장기시계열 데이터를 머지(merge)하는 방식에 대한 지원 외에도, 가중치를 활용하거나, 각종 데이터 재구성 등의 작업과 관련해서 Tip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8) 패널데이터의 국제화 작업 부진 문제

복지패널조사는 지난 수년간 코딩북의 영문화 작업을 통해 외국연구자들 또한 큰 어려움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왔다. 하지만 정작 외국연구자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더 나아가 복지패널조사의 데이터를 다른 국가의 패널 데이터와 연계하여 분석하는 작업도 활발하지 않았다. 개별연구자가 Luxembourg Income Study(LIS)의 패널데이터와 연계하여 분석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사실 외국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았

다. 더욱이 복지패널 데이터를 국제비교를 위한 포맷으로 전환하는 작업 또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개선 방안

위에 언급한 다양한 문제점 또는 해결과제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일부 과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노력이 필요한 과제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적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1) 표본 유지 및 관리 방안의 마련

복지패널조사의 응답가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는 두 가지 문제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먼저 조사응답가구, 즉 조사표본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응답가구는 2006년 시작한 원가구와 2012년 추가된 1차 신규가구로 구분된다. 하지만 그 구분 없이 조사응답가구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표본관리방식은 한번 응답을 거부한 가구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2년 과거 응답을 거부한 가구에 대해서도 1~2년 뒤 다시 조사를 실시하여

66가구를 복원했던 것처럼, 표본을 복원하는 방식을 정례화하는 것이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표본을 유지하는 문제이다. 즉 아무리 체계적으로 관리해도 조사표본이 감소하는 추세는 피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신규표본을 추가하며, 신규표본의 표집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2012년 표집방식 외에도 조사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외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복지패널 포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 조사대상 결정방식의 명료화

복지패널조사는 표본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 규모의 표본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응답가구를 유지하려는 유혹이 강하다. 하지만 복지패널조사는 저소득층 가중 표집으로 인해 노인가구의 비중이 높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뇌병변 및 치매노인으로 구성된 1인 가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1인 가구라는 점에서 응답자가 사실상 응답능력이 취약하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³⁾. 응답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제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응답능력의 있음과 없음은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사실상 복잡한 문항에 제대로 답할 수 없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3)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결과, 이들 모두가 응답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이들 중 일부는 외부의 도움이 있으면 일정 수준 응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하지만 응답가능과 불가능을 가늠하는 기준이 개관적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결정이 필요함.

다는 점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 복지패널조사는 이들이 분석결과를 왜곡한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향후 조사대상 가구 중 응답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가구를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조사내용의 적정성 담보

복지패널조사는 지금도 매년 조사에 앞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 이는 크게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조사문화 등의 설계에 있어 개인에게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문항의 금지 등을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패널조사에서 조사내용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노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문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4) 조사표 문항 수의 조정

2013년 제8차 복지패널조사 당시 조사 응답률을 높이고 답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표 문항을 대폭 줄이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물론 한번 바꾼 문항을 다시 바꾸기 힘들다는 점에서 추가나 삭제 뿐 아니라 수정에 대해 내부와 외부의 패널협의회를 통해 엄격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패널 조사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조사표 문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패널협의회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응답자 수가 적고, 응답율도 낮으며, 실제 분석에 활용되는 빈도도 낮은 조사표 문항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조사방식의 개선방안

현 조사방식의 강점을 살리면서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지조사팀을 늘려 나가는 방식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복지패널조사는 2014년부터 현지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 지역으로 파견되는 조사원을 해당 지역에 인접한 곳에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조사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집중적인 조사원 교육을 통해 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우려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현지조사팀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은 조사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일정기간 현재의 파견방식과 현지조달방식을 병행하며,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6) 패널조사 시점과 패널데이터 제공시점의 조정

패널조사를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패널데이터는 횡단면 조사데이터에 비해 데이터 공개시점을 앞당기는 일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각 시점에 모집단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보다 종단적 변화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패널데이터를 횡단면 데이터처럼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공개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처럼 데이터 공개시점을 앞당기는 경우, 적절한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연도에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 데이터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도 적정하지 않

다. 따라서 패널데이터는 조사한 다음해에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7) 패널데이터 사용자들을 위한 편의제공 강화

복지패널조사의 데이터는 점점 많은 사용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다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의 공개와 공유이다. 현재 복지패널 데이터의 사용자들은 크게 세 개의 다른 통계패키지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 통계패키지별로 데이터의 머지와 가중화 등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활성화하여 사용자들 또한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복지패널조사는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패널분석 외에도 공통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분석결과 및 워킹페이더의 제공이 그것이다. 셋째, 데이터 설명회의 효과적 활용이다. 매년 데이터 공개시점에 패널데이터의 구조와 문항, 그리고 활용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8) 복지패널데이터의 국제적 활용

복지패널조사는 내부적으로는 국내 복지패널

데이터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외국의 복지패널조사와 비교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외부적으로는 외국의 연구자들도 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자는 LIS 등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아시아지역의 패널조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지칭한다. 아시아판 LIS를 구축하는 것이다. 후자는 지난 2~3년간 준비해 왔던 코딩북의 영문화를 완료함으로써 외국의 사용자들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외국의 연구자들이 한국패널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5. 나가며

복지패널조사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사를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조사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구성하고,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결측 케이스를 보정하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며, 가중화 방식에서도 새로운 실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유사한 데이터와 비교할 때, 그 추세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이는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게 하는 전제조건인 셈이다. 이제 다가오는 10년을 준비해야 할 때다. ■